

HEADLINE NEWS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대폭강화 (뉴욕)

뉴욕市는 그 동안 지구이용규제(Zoning Regulations)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위치·크기·높이 등을 규제해 왔으나 광고회사들이 최근 범칙금을 단지 사업비용 정도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최근 종합적인 옥외광고물 규제방안을 마련, 현재 시행하고 있다.

市가 시행중인 규제방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회사는 市 건설국(Dep. of Building)에 등록해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목록을 제시해야 하며,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관련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 첫날에 15,000달러,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규정을 계속 어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금지시키게 된다.

☞ 2면에 계속

(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86-01.html)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하수처리수 이용해 전력 생산 및 판매 (고베)

도시환경

- ② '폐기물발생량 제로' 공업단지 조성 (일본 : 가와사키市)
- ③ 교차로에 대기정화장치 설치 (동경)
- ④ 모든 공공건물의 '그린빌딩'화 추진 (시애틀)
- ⑤ 다양한 환경관련세제 도입 추진 (동경)

도시 교통

- ⑥ 관광객 주차차량 대상 「관광환경세」 부과 추진 (일본 : 다자이후市)
- ⑦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설문조사 실시 (동경)
- ⑧ 대중교통수단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미국 : 콜리블랜드市)
- ⑨ 버스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위해 「버스포럼」 매년 개최 (뉴욕)
- ⑩ 저공해차량 공공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할인 (동경)
- ⑪ 경전철 도입계획에 대한 주민찬반투표 실시 (오스틴)

행.재정

- ⑫ 대규모 공공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추진 (동경)
- ⑬ 지하철역 작명권 공개입찰 추진 (보스턴)
- ⑭ 정년 후 직원 재임용제도 도입 (동경)

사회복지

- ⑮ 청소년선도단체의 활동 지원 위해 보조금 지급 (시카고)

옥외광고물 설치규제 대폭강화

☞ <1면서 계속>

그리고 과거에는 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市는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市는 공원 및 고속도로변 설치 광고물이 경관을 해친다고 보고 공원, 승용차 전용도로(Parkway), 고속도로변 등에서 200피트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 현재 시행중이다.

① 하수처리수 이용해 전력 생산 및 판매 (고베)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는 내년 4월부터 산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시가지 하천으로 흘려보내면서 경사가 큰 지형의 낙차를 이용, 발전(發電)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市는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발전에 필요한 펌프장의 전력으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민간 전력회사에 팔면 매년 150만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고(兵庫)구의 산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고도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는 지금까지는 인근의 하천으로 방류되었지만 올해 가을부터는 시가지에 조성된 하천으로 공급되며, 도시하천으로 하수처리수가 보내지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과 펌프장 사이 약 70m에 이르는 낙차를 이용해 펌프장에서 발전(發電)하게 된다. 직경이 35cm인 송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하루 16,000톤의 하수처리수는 펌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차를 돌림으로써 시간당 85kW를 생산하게 된다. 市는 펌프장 전력소요량 13kW를 제외한 72kW를 전력회사에 팔면 연간 560만엔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3. 2)

② ‘폐기물발생량 제로’ 공업단지 조성 (일본 : 가와사키市)

일본 가와사키(川崎)시 京浜임해부에서는 ‘폐기물발생량 제로’ 공업단지를 조성해 금년중 순차적으로 조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공단에는 제지 및 금속관련 중소기업 17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며, 각 업체들은 주변의 공장과 연계해 폐지, 폐플라스틱, 에너지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이 조성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물발생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공단 조성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약 150억엔을 들여 조성되는 이 공단에서는 新螢제지그룹이 수도권의 폐지를 모아 화장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증기는 공단 내 금속관련기업의 설비 보온에 이용하고, 종이에 윤택을 내는 데 사용하는 백토 등의 찌꺼기는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인근 제철소에 있는 고온 용광로의 환원제로 재이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콤포스트화하여 공단 내 녹지의 비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日本經濟新聞, 3. 14)

③ 교차로에 대기정화장치 설치 (동경)

東京都와 국토교통성, 수도권고속도로공단은 차량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순환 7호선과 수도권고속도로5호선의 교차로에 대형 대기정화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오염된 대기를 지하로 유도, 토양층에서 여과시킨 후 지상으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으며, 토양이 오염 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는 구조이다.

(日本經濟新聞, 1. 27)

4] 모든 공공건물의 '그린빌딩' 화 추진 (시애틀)

시애틀市는 향후 시가 건립하는 공공건물을 전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점차 민간 건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市는 이를 위해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의 평가방식을 도입, 현재 신축중인 市청사 및 공공건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평가방식은 건물의 환경친화 정도에 따라 녹색점수(Green Point)를 부여, 4단계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구체적으로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샤워장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근무자의 햇빛 및 창문 조망에 대한 노출 정도, 재활용자재 사용, 에너지와 물의 절약, 주차장 수요의 최소화 등을 체크해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녹색점수가 3등급 이상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市는 신축중인 市청사 건물에 자연채광 및 에너지 절약형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카펫을 사용하며, 건축자재로 쓰는 목재는 필히 공인된 삼림지역의 목재만 쓰도록 했다. 또한 구치소 건물에도 열을 방지하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생태지붕(Eco-Roof)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신축 공연장에는 화학물질을 적게 발산하는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환경친화형 건물의 건설비용이 일반건물보다 4~10%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市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린빌딩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 그린빌딩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The Seattle Times, 3. 17)

5] 다양한 환경관련세제 도입 추진 (동경)

東京都知事は 최근 都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향후 다양한 명목의 환경관련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東京都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환경관련세제는 대형 디젤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고속도로이용세, 파칭코(슬롯머신)업체의 신규시설에 부과하는 파칭코세, 산업폐기물 배출 업체에 부과하는 산업폐기물세 등이 있다.

(日本經濟新聞, 3. 15)

6] 관광객 주차차량 대상 「관광환경세」 부과 추진 (일본 : 다자이후市)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다자이후(太宰府)시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관광객들의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과 함께 「관광환경세」를 내년 4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다자이후市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약 650만명 수준이며, 관광버스나 자가용 유입량은 약 60만대에 이른다. 특히, 天滿宮의 신정맞이 행사인파가 최대 200만명에 이르러 이 일대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市는 「관광환경세」 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인 세금 일부를 주차장 주변의 녹지대 조성 및 화장실 정비 등 관광단지를 정비하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율이나 세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天滿宮 주변의 주차요금(승용차 기준)이 1일 평균 400~500엔 수준인 점에 비추어, 주차차량 1대당 100엔 정도의 추가 과세를 검토중에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다자이후市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과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신세(新稅) 도입 움직임은 지난해 4월 「지방분권일괄추진법」의 시행으로 지자체 독자과세가 총무성장관 허가제에서 동의제로 완화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추진중에 있는 관광 및 레저관련 新稅로는 야마나시縣 3개 정촌(町村)의 낚시세, 요코하마市의 승마투표권발매세 등을 들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 3. 7)

7] '도심유입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설문조사 실시 (동경)

東京都가 도심부예의 차량 유입을 요금으로 규제하는 혼잡통행료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금 수준에 따라 자가용 이용자의 30~50%가 자가용 이용을 그만둘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10% 정도가 화물차 이용을 중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재 都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연간 300톤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日本經濟新聞, 2. 24)

8 대중교통수단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미국 : 클리블랜드市)

최근 북미 지역의 몇몇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대(對)고객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Cleveland)市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Ride Happy or Ride Free’ 프로그램을 실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승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보스턴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버스나 기차의 도착시각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왕복 통행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Customer Bill of Righ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본지 제 19호 1면 「버스·지하철 30분 이상 연착시 무료승차권 제공」 기사 참조). 또한 캐나다 밴쿠버市의 Translink는 1월 8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실시 기간 중에 버스와 기차 승객을 West Coast Express 통근열차로 원활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www.apta.com/news/release/mar2001.htm)

9 버스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위해 「버스포럼」 매년 개최 (뉴욕)

뉴욕 대중교통 이용자 위원회는 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버스포럼」을 오는 4월 18일 개최기로 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은 버스 이용자들이 업체관계자와 관련공무원들에게 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Queens 지역의 버스노선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포럼에서는 맨해튼을 가로지르는 버스노선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www.pcac.org/busform.htm)

저공해차량 공공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할인 (동경)

東京都는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저공해차에 한해 都 또는 외곽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총 주차시간 중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해주거나 하루 500엔 정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차료 할인대상 차량으로는 국토교통성이 인정한 매연억제차량과 천연가스(CNG)차, 혼합에너지차, 전기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등이 있다.

(日本經濟新聞, 3. 7)

경전철 도입계획에 대한 주민찬반투표 실시 (오스틴)

최근 실시된 미국 오스틴의 경전철 도입계획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결과, 2천여 표 차이로 도입계획이 부결되었다. 대중교통공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주민투표에 따르면, 오스틴 시민 절반 이상이 이 계획을 찬성한 반면, Lago Vista를 비롯한 오스틴시 이외의 주민들은 경전철 도입효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간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이 계획은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중교통체계는 빈약한 오스틴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질과 수송용량을 제고하는 최적의 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 오스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www.lightrailnow.org/news.html)

대규모 공공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추진 (동경)

東京都는 공공사업 합리화를 위해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전에 필요성, 비용 및 효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사업 사전평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정비할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등 구체적인 지표를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都는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조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日本經濟新聞, 2. 1)

지하철역 작명권 공개입찰 추진 (보스턴)

보스턴市 교통당국은 자원 조달을 위해 최근 보스턴에서 가장 혼잡한 4곳의 지하철역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공개입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입찰은 市가 최저입찰가격을 역별로 각각 50만~2백만 달러로 정해놓은 후, 입찰자가 이 최저입찰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낙찰자는 기존의 역이름 옆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민간업체명 또는 특정 개인 이름을 넣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The New York Times, 3. 9)

㉞ 정년 후 직원 재임용제도 도입 (동경)

東京都는 4월부터 정년을 맞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都는 연금지급 개시연도가 단계적으로 늦추어짐에 따라, 정년을 맞은 직원을 1년 단위로 재고용해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년씩, 최종적으로는 65세까지 늦추어지게 되었다. 재임용 대상자로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이 안된 사람이 해당된다.

(日本經濟新聞, 2. 17)

㉞ 청소년선도단체의 활동 지원 위해 보조금 지급 (시카고)

시카고市는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이 범죄, 마약,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 및 청소년 선도단체를 대상으로 'Mini-Grant'라고 불리는 소규모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市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한 지역사회단체 중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상단체를 선정, 여름방학 기간 중에 500~2,000달러(약 60만~2,40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100여개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된다.

(www.ci.chi.il.us/HumanServices/ChicagoForYouth/CommunitySupport.html)